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판 지연 해결해야” vs “檢 무리한 압수수색 남발 제지”

〈輿〉

조 “사법권 독립·공정 재판에 최선 재판 지연·압수수색 문제 알고 있어 세심히 살펴 필요 조치 강구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4일)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적하면서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되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하는 기간이 많이 차이 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강욱 전 무소속 의원은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다. 그런데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3개월만에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

이 1년5개월 걸렸다. 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정치권하고 일반인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인은 (법원에서) 한번 심리하고 끝나지 않나”라며 “국민들은 권력에만 사법부가 동조한다는 의심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판결이 여와 아와 달리 한다는 의심

을 갖는다.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시절”이라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재판 지연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격정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검찰의 반복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남발을 제지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수사관)이 들이닥쳤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방을 뒤졌다”며 “(압색 영장은) 이제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김 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13년 압색하고 한달 내내 머무르며 압색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 지사가 선출돼서 자신이 들고온 컴퓨터도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영장을 갖고 들어와서 그 전 자료만 보겠다고 했더니 최근 자료를 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압색 영장 남발해서 한번

들어오면 정치인들 정치생명 끝난다. 국민들도 목숨 끊는 사례가 많다”며 “(검찰이) 언론에 다 터트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난리 굶을 한다. 법원이 제지를 해야 하는데, 법원은 100% 거의 다 발부해준다. 압색 영장 발부 자판기 아니냐는 비판 들어봤나”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며 “제가 대법관 근무 당시에도 압색 관련해서 획기적인 판결을 냈다.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든가, 압색 자료 반환을 청구한다든가,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판결을 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다면 세심하게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는 조 후보자는 무난히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역사에 남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대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輿, 한동훈·원희룡에 총선 바람몰이 기대

추경호·박민식·이영 등 총선 출마원 “계약을 출마, 정해진 거 없어” 희생 혁신안, 최고위서 결정 어려워

윤석열 정부 1기 장관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스타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당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 장관과 원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를 치르면, 수도권에서도 바람몰이를 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개각으로 교체된 원 장관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추경호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3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또 박민식 장관은 경기 분당에 출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지역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영 장관은 서울 서초를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 장관의 경우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 유불리나 제 울타리만을 고수하는 생각은 나부터 버릴 것”이라면서, 당내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제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에도 여지를 둔 바 있다.

그는 이날 ‘계양을 출마’ 관측에 대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형태를 지금 정해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출마수범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라면 더 앞장설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현재 당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가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불출마 또는 협지출마(희생) 혁신안을 두고 대립 중이다.

혁신위는 전날 최고위에서 희생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혁신안이 안전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지도부의 대답 여부에 따라 ‘비대위 전환’이나 ‘지도부 총사퇴’ 등을 요구할 기세다.

반면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시간을 달라”며 “최고위원들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데 최고위에서 그런 내용을 의결하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다. 당헌당규 문젠데 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혁신위가 조기에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지도부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여의도에 복귀하는 장관들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당 일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에선 정치인 출신인 원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선거의 중심에서고, 한 장관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년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선거를 지휘해야 하므로 ‘협지 출마’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 장관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협지보다는 강남에 출마하고, 전국 유세를 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 장관은 이날 선대위원장이거나 비대위원장 역할론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맞지도 않고,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구체적인 문제는 (장관) 임무를 마치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당과 의논하며 한발 한발 걸어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2000년 30대에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과 다섯 번 선거를 치러져 본 적은 없는데,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대표 선수로 가장 많이 나선 사람으로서 국정을 위한 국민 지지와 세력 연합을 위해 책임을 나뉠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당정, 어획량 급감에 최대 3000만원 지원

오징어 생산업체 지원 민당정협의회 대구 군부대 이전 등 ‘지역 맞춤형’ 행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워진 어업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대구 군부대 이전 관련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선거를 앞두고 ‘지역 맞춤형’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체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징어 생산업체의 경영 여건 안정

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해상풍력 난개발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려워진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단 오징어 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어선 보험료 납부도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 /서예진 기자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서비스업 확장”

▶▶ 1면 ‘尹 “수출 진흥이 곧 민생”서 계속

아울러 “수출 주력 품목을 더욱 다변화하고, 수출이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주력 수출 주력 품목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R&D(연구개발)를 최대한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 서비스 분야를 제조업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미래 수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수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무역 인력을 2027년까지 6000명 이상 양성하고, AI(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체제를 구축해내겠

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에 강점이 있는 스타트업의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정부가 밀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를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윈스톱 수출, 수출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우리 기업이 나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위기를 돌파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역의 새 역사를 써 보자”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